

제 7회 대안담론포럼

한국의 대안정치경제모델을 찾아서

일 시_ 2013년 8월 23일(금) 10:00-17:20

장 소_ 한겨레신문사 청암홀

주 최_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한림국제대학원대 SSK 대안거버넌스연구사업팀

자본주의 다양성과 대안적인 “사회 경제 모델”의 원리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한국 경제는 60년대 이후 얼마 전까지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 그러한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한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여러 증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확대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 시장 및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는 물론, 일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수출 부문과 나머지 경제 부문으로 나누어지는 이중 구조의 문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고갈과 생태적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대중적인 처방이나 대응으로 풀 수 없고 지난 반 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한국 자본주의의 독특한 구조에서 비롯되는 뿌리 깊은 문제들이었다.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다수 대중들의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부닥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 문턱을 앞두고 경제의 동력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소위 ‘중진국 함정’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개별적인 몇몇 정책과 제도에 대한 고민과 개선 방향을 넘어서서 기존의 한국 자본주의 모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치경제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97년의 IMF 위기 등 몇 번의 굴곡은 있었어도 현존하는 한국 자본주의는 60년대 초에 시작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모델의 기초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세계 정치경제 질서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고 또 산업 기술적 측면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환경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으며 그 와중에서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해 들어가기 위한 여러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및 수정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작동을 보여준 다양한 모델의 일국 자본주의에 있어서 그 틀을 여러 제도들은 서로 상호 보완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양상불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상식이다. 그리고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마련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은 이후의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로(path)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비록 많은 개별적인 정책과 제도의 개선과 개혁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반세기에 이르도록 지속된 기존의 한국 자본주의 모델의 틀의 한 부분으로서만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터져 나오는 문제들이 기존 모델이라는 구조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일 경우에는 문제 해결에 분명한 한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에 우리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대안적인 한국 자본주의의 모델을 구상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현재의 한국 자본주의는 IMF 위기 이후 본격화된 소위 시장주의적 개혁을

거치면서 아시아 나라들 중에서는 대단히 미국식 자본주의에 유사한 이른바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LME)’의 형태로 변한 상태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조정 시장 경제(CME)’의 자본주의 모델을 구상해 볼 것이다. 먼저 우리는 이 ‘모델’이 다소 협소한 ‘경제 모델’이 아니라 사회 전반 나아가 생태 문제까지를 고려에 넣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 경제 모델”의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경제 모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조직 및 운영 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의 지구적 경제에서 현존하는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의 조직 및 운영 원리인 ‘자본 시장의 합리성’을 대체할 수 있는 원리로서 ‘인간의 발전과 사회의 강화’라는 것을 제시할 것이다.

2. 어째서 “사회 경제 모델”인가

90년대 이후 정치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하나로 떠오른 것이 “자본주의 다양성”의 문제이다. 공산주의 체제가 사실상 지구상에서 소멸한 이상, 경제 시스템 연구의 초점은 나라마다 상이한 제도적 형태를 띠고 있는 자본주의의 다양한 모습으로 옮겨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90년대 이후 거세게 몰아친 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소위 “앵글로 색슨” 형태의 자본주의가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자리잡게 되면서, 2차 대전 이후 각 나라마다 다양한 제도적 형태를 발전시켰던 이 “일국 자본주의”가 과연 “가장 효율적인” 영국식 미국식 자본주의라는 “단일의 최상의 모델 one best model”로 수렴할 것인가 아니면 각국 자본주의의 차이점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가 이러한 연구의 인식 관심을 드높인 바 있었다.

2001년에 출간된 홀과 소스키스가 편집한 [자본주의의 다양한 형태: 비교 우위의 제도적 기반들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s)]은 이 분야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이루는 성과물이다.¹⁾ 대서양 양쪽에서 10년 가까이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하여 나온 이 저작집은 풍부한 사례 및 분석과 더불어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을 분석하는 데에 이후 기본적인 틀이 된 중요한 개념 및 시각들을 담은 이론적 틀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인 홀과 소스키스는 시장주의에 기초한 영미식 자본주의가 당연히 더 나은 경제적 효율성과 실적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통념에 도전하면서, 나라마다 자국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비교 우위를 가져다주는 기초로서 자본주의의 여러 제도들이 나라마다 제도화된 방식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나라마다 다양한 이 각각의 제도들은 또한 다른 제도들과 서로 상호 보완성을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나라별로 특수한 자본주의 모델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가지게 되는 원천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자본주의 모델 내부의 상호 보완성을 이해하는 데에 열쇠가 되는 제도는 무엇일까. 이들은 기업과 기업의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적 틀이야말로 그 중심에 있다고 본다. 노사 관계, 금융 시스템, 직업 훈련 체제, 산업 정책 등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여타 다양한 제도들의 형태는 이 기업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장치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간에 상호 보완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기업 간 관계의 조절을 시장 기구의 작동에 맡기는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LME: liberal market economy)”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조정에 맡기는 “조정 시장 경제 (CME: coordinated market economy)”로 분류한다.

이들의 논의는 자본주의 모델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출발점과 틀을 제공한다.

1) Peter A. Hall, David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시장지상주의에 입각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정치경제의 틀이 “자연적인” 혹은 초역사적인 규범처럼 통용되고 있는 21세기의 현실에서 시장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여러 장치들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와 규범들을 조정하는 모델이 얼마든지 현실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강한 경쟁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들의 연구는 분명히 대안적인 정치경제 질서를 착상하고 구축해가는 데에 초석이 될 만하다. 하지만, 기존의 한국 자본주의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모델을 새로이 구상하고 또 이를 위한 실천을 일구어내려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는 몇 가지 서로 긴밀히 연결된 한계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제도 포괄의 범위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조직이라는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경제”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더 넓은 “사회” 안에 묻어 들어 있는 것이며, “경제”와 “사회”가 포괄적으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자본주의 시스템의 재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드주의적 노사 관계의 배후에는 남성중심적 가족 관계가 있으며, 유연한 노동 시장의 배후에는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혹은 여타 사회적 관계에 의한 재분배 혹은 소득 이전의 장치가 있다. 또 사회 너머에 있었던 생태 영역이 21세기의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자본주의 제도들이 상호 보완성을 가진 하나의 총체로 구성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경제” 영역을 넘어서 사회 그리고 생태 영역에 관련된 제도들까지 어떻게 서로 조정을 이루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²⁾

둘째, 이미 존재하는 일국 자본주의 형태 내의 여러 제도들이 어떻게 상호 보완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총체(ensemble)를 이루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사후적 정태적 이론이며, 그러한 상호 보완성의 총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역사적 동태적인 이론의 틀은 아니다. 예를 들어 종래의 일본 모델에서 은행 위주의 간접 금융 시스템이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보게 만들어서 종신 고용 체제라는 고용 체제와 기능적으로 짝을 이룬다는 설명은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결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생겨난 것은 종신 고용 체제인가 아니면 주거래 은행 체제인가? 그리고 그러한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결합은 우연의 산물인가 아니면 집단적 계획의 산물인가 아니면 개별 행위자들의 이기적 판단의 결과로 생겨난 의도치 않은 산물인가? 이 문제는 특히 대안적 정치경제 모델을 새로이 구상하고 그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³⁾

셋째, 이러한 정치경제 모델을 구축하게 된 사회 정치 세력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행동이 이러한 상호 보완성을 가진 총체를 낳을 수 있도록 일관성을 부여해 준 원리 혹은 계획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가 드러나지 않는다. 20세기의 자본주의는 전설 속의 국가처럼 철인(哲人) 독재자의 설계도와 명령에 따라 한 번에 생겨난 체제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집단적인 인간 행위 주체들이 서로 밀치고 당기는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이다. 그렇다면 이 집단 주체들은 어떻게 이러한 질서를 향하여 나서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동일한 상

2) 이 점에 있어서 프랑스의 조절 이론 (regulation theory) 이나 미국의 사회적 축적 구조론 (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은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전자의 중심 개념인 “축적 레짐 (accumulation regime)”이나 “사회적 조절 양식 (social mode of regulation)”은 생산 뿐만 아니라 소비 나아가 사회 재생산 영역 전체를 이론의 범위로 삼는다. Robert Boyer, *Regulation Theory: the State of the Art* London: Routledge, 2002.

3) 홍기빈, [자본 통제 복합체: 일본 자본주의의 역사적 구조 1931-1968](가제), 책세상: 2014 (근간). David Coates, *Varieties of Capitalism, Varieties of Approache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5의 글들을 참조.

호 주관성 (intersubjectivity)을 구축하였기에 이러한 효율적인 일국 자본주의의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또한 현존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정치경제 질서를 극복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인 정치경제 모델을 구축하려는 이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이론틀로서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닌 보다 폭넓은 “사회 경제 모델”이라는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치경제 질서는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자본 축적 등과 같은 실적(performance)의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그것만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다면 대안적인 모델을 형성할 수도 없다. 경제 활동의 주체인 동시에 그 활동의 목적인 인간과 사회와 자연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안녕을 (welfare) 가질 수 있을 때에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담보할 수가 있다. 또 대안적인 정치경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힘과 세력은 좁은 의미에서의 기능적인 “경제” 영역에서만 찾을 수 없다. “경제” 영역을 어떤 질서와 원리로 조직할 것인가는 그 영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 사회, 자연의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사회와 생태 영역 전반에 걸쳐 모두의 안녕을 담보할 수 있는 질서를 구상하고 구축해 나가려면 이 “바깥”의 영역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회적 힘과 세력들을 새로운 대안적 모델의 구상과 구축에 함께 동참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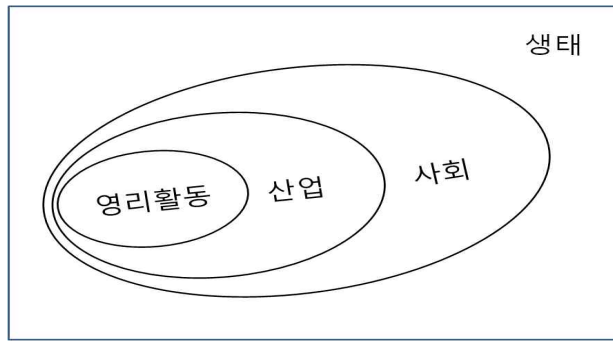
또 “사회 경제 모델”의 틀에서는 “조직 및 운영 원리”의 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홀과 소스키스의 경우 “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여러 제도와 행위자들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제도 및 기제로서 “시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조정 시장 경제”의 경우에는 문화, 암묵적 규칙, 제도, 역사, 전략적 행동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이 한마디로 “비시장적 (non-market)”인 방법으로 조정을 이룬다고 본다. 만약 앞에서 말한 대로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 영역에서 성립하는 경제 모델과 그 효율성만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상호 보완성을 가진 앙상블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보다 폭넓은 사회 및 생태 영역은 경제적 효율성을 유일의 가치로 삼아 존재하는 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경제”와 “사회”의 영역을 통틀어서 순조롭게 작동하는 “사회 경제 모델”을 구축하려면 그것의 조직과 운영에 참여하는 다종다기한 사회적 힘과 세력들을 폭넓게 조정할 수 있는 조직 및 운영 원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대안적 자본주의의 모델을 이러한 “사회 경제 모델”의 규모로 구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내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갈등과 모순의 지점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자본주의 시스템의 해부

전체 자본주의 시스템은 생태, 사회, 산업, 영리 활동의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에서 순서대로 앞의 것은 나머지 것들을 자기 내부에 포함한다. 이를 그림으로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사회 경제 모델”로서의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4개의 영역



첫째, 영리 활동(business)은 베블런이 말하는 “돈벌이로 조직되는 (pecuniary)” 영역이다.⁴⁾이 영역은 화폐의 창출, 배분, 유통, 축적이라는 순환 과정으로 구성된다. 주지하듯이, 자본주의란 산업은 물론 사회적 관계 전체 나아가 자연에 대해서도 모든 사물과 사건을 화폐로 환원하여 화폐의 증식 즉 이윤 추구라는 원리에 따라 조직하는 사회 시스템을 그 본성으로 삼는다. 따라서 베블런이 말하듯, 자본주의 시스템은 산업은 물론 사회와 자연에 대해서도 이 영리 활동이 지배적 위치에 서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화폐의 창출, 배분, 유통, 축적이라는 순환 과정으로 볼 때에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제도와 기구들은 국가, 은행 및 금융 시스템, 기업의 영리적 측면 등을 들 수 있다. 화폐는 조세 권력을 기초로 삼아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이것을 중앙은행을 정점으로 하는 은행 시스템이 “유동화”하여 창출하여 사회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힘을 갖는 채무 증서라고 할 수 있다.⁵⁾ 이렇게 해서 화폐가 창출되면 이는 자본 시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하여 배분되는 바, 그 때 우선적으로 이를 배분받는 주체는 영리 활동을 통해 그 화폐를 증식시킬 능력을 주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영리 집단 즉 기업이 된다. 화폐는 증식의 약속과 전망이 없는 한 결코 유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리 활동 부문 전체로 배분된 화폐는 투자와 재투자라는 과정을 통해 유통되며 그 과정에서 산업과 사회 전반으로 다시 배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화폐의 유통 과정은 최소한 기준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야만 하므로, 유통 과정의 끝은 화폐의 축적으로 종결된다. 이 과정이 사실상의 자본 축적 과정이며, 이를 통해 산업과 사회 및 자연을 끊임없이 이윤 추구의 방향으로 재조직화하는 과정이 경제 발전의 과정이 된다.

둘째, 산업 (industry) 또한 베블런이 말하는 바와 같이, “공동체 전체의 쓸모를 위해” 재화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생산되고 또 소비되는 영역이다. 산업 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산업은 기계제 생산에 근거하고 있다. 그 이전의 농경제 사회에서의 산업은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연의 여러 과정 속에 묻어들어 있었으나, 산업 사회에서는 생산의 성격이 물리적 화학적 과정으로 분해되어 다시 재조직되는 기계적 합리성에 따라 지휘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계적 과정으로서의 산업이 공동체 전체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는 독립된 분야로 떠오르게 된 것이 현대 자본주의 및 산업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기계적 합리성과 효율성의 논리는 생산 과정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소비를 조직하는 데에도 나아가 기계적 생산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여러 사회적 과정과 자연 생태 영역의 조직에

4) Thorstein Veblen,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 New Brunswick: Transaction, 2000(1904). 또 토스타인 베블런, 홍기빈 역,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책세상: 2009.

5) 화폐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장 잘 체계화한 저작으로는 Geoffrey Ingham, *The Nature of Money* London: Polity Press, 2004. [국역: 죠프리 잉햄, 홍기빈 역, [돈의 본성], 삼천리: 2011]

있어서도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베블런이 말하는 바, “기계적 과정 (machine process)”이 사회와 자연 전체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다.⁶⁾

자본주의의 영리 기업은 앞에서 본 대로 영리 활동 영역에서의 주체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대규모로 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생산 및 소비 활동을 조직하는 산업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과 자연은 인적 물적 자원으로서, 즉 “노동”이라는 상품으로 또 “부동산” 혹은 “자원”이라는 상품으로 투입된다. 생산 관계에서 기업들이 서로 맺고 엮이는 산업 조직 관계, 노사 관계, 산업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국가 및 여타 기관들이 이 영역을 구성하는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 (society)는 잠정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펼쳐지는 장으로서의 구체적 인간 관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역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닌가는 19세기 말 이래 사회 이론과 사회 사상에서 논쟁을 겪어 온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19세기 이래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 대부분은 만사만물이 합리적 계약 관계로 엮어내는 시장 관계 이외의 “사회 영역”이라는 것의 존재를 부인하였으며, 이는 20세기 말에 오면 마가렛 닷처 수상의 저 유명한 “사회란 없다”는 언명으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칼 폴라니가 지적하는 대로, 산업 혁명으로 시장 경제라는 “악마의 맷돌”이 인간 세상을 점령하기 시작하자 이에 맞서며 나타난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또 자연이 자연으로서 그 본령의 삶을 펼쳐나가는 장으로서의 사회라는 것의 존재를 강하게 내세웠으며 이것이 인간 세상의 핵심이니 이것을 소중히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을 중심 원리로 하여 산업 경제를 재구성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⁷⁾

하지만 19세기 후반으로 들어오면 독일의 “사회정책(Sozialpolitik)”이나⁸⁾ 영국의 “토리 사회주의(Tory Socialism)”에서 보듯 보수적인 지배 계급조차 이러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윤택하게 부양하여야 경제의 활력과 생산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재분배적인 복지 정책을 비롯한 각종 사회 입법과 사회 정책들이 특히 1930년대 이후가 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장치로서 자리잡아 간다. 197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국가 주도의 사회 정책과 사회 제도에 대해 그 관료적 억압적 비효율적 성격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일면서 시민 사회의 역동성이 깃드는 영역이 되었다. 스웨덴 등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1930년대 일찍부터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아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안을 발전시키고 이를 제도와 정책에 구체화시키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넷째, 생태는 (ecology) 단순히 죽어있는 수동적 대상인 “자연”이나 산업 사회의 기능적 작동의 배경이 되는 “환경”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전체 지구의 영역을 하나의 “삶의 영역(biosphere)”으로 보는 문제 의식을 포함한다. 즉 기존의 인간과 자연,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을 넘어서서, 모든 존재와 사건을 그 자체의 시간적 지속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각각의 과정 (process) 그리고 그 과정들의 결합과 총합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과정들로 이해하며 인간과 사회를 그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박하게 요구된 것은 70년대 초 이른바 “성장의 한계”가 지적되고 또 21세기 들어 지구 온난화와 산업 문명간의 관계가 과학자들에 의해 부인하기 힘든 명백한 사실로 제기되면서이다. 산업 문명이

6) Veblen, *op.cit.*, ch.1.

7)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Press, 1957 [국역: 칼 폴라니,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길: 2009] 또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Keith Taylor, *The Political Ideas of the Utopian Socialists* London: Frank Cass, 1982.

8) Franz-Xaver Kaufmann, *Thinking about Social Policy: The German Tradition*, Heidelberg: Springer, 2013.

자연에 가하는 문제를 단순히 “외부성”의 문제로 보아 비용과 보상과 제도 규제만으로 접근하는 기존의 경제학적 패러다임은 옛것이 되었고, 그 대신 “지속가능한” 형태로 산업 문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부의 정의 자체를 새롭게 바꾸어 그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 성장과 경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주장이 나타났으며, 혹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열역학 제 2법칙에 해당하는 법칙이 경제 성장에도 작동한다고 보아 지속가능한 성장마저도 반대하고 성장 자체를 축소하는 (“De-growth”)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압박한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여러 자원 고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와 이를 감안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생산성 및 효율성 패러다임의 창출 등은 지구상의 어떤 산업 국가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네 개의 영역은 자연적으로 서로 조응하지 않는다. 네 영역 모두가 고유한 각자의 논리가 내재해 있는 곳이므로, 오히려 필연적으로 서로 탈구(脫臼: dislocate)를 일으키게 된다. 자본주의 산업 문명에 내재한 이러한 네 영역의 탈구를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 조응시킬 것인가가 “사회 경제 모델”을 분석하고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1) 영리 활동과 산업 사이의 갈등

“화폐를 수단으로 한 화폐의 생산 과정”이라고 할 영리 활동의 영역과 기계적 합리성과 생산 활동 조직의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의 영역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19세기 말 이래 현실로 확인된 바이다. 전자의 영역에서 모든 행위자들이 움직이는 행동 논리는 말할 것도 없이 화폐로 계산되는 바의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자신이 소유한 자산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의 조직과 운용은 이러한 화폐적인 자산 가치 극대화의 논리에 의해 그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자본주의 산업 경제의 특징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정당화의 논리는 예외 없이 이러한 특징이야말로 산업의 조직에 있어서 최대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두 영역의 논리가 하나로 일치하는 것은 산업 경제가 급속하게 팽창하는 산업화의 초기 국면일 뿐, 일정하게 산업화가 궤도에 오르고 독과점이 형성되며 특히 자본 및 금융 시장에 의한 산업 조정이 자리잡게 되는 단계에서부터는 전혀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결과 두 영역 사이의 갈등은 자본주의 경제에 고유한 몇 가지 고유한 유형의 위기들을 가져오게 된다. 첫째, 실업과 저생산 (underproduction)이다. 사회적 가치의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큰 편익을 낳을 수 있는 산업 활동이라고 해도, 투자가에게 있어서 리스크와 미래 가치를 감안한 기대 수익의 현재 가치로 평가되는 자산 가치의 극대화라는 점에서 볼 때 투자할 만한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⁹⁾ 그렇게 되면 만성적인 대량 실업이 나타나게 되며 사회적 가치가 높은 공공재의 공급은 방기되며 또 산업의 재조직은 산업 영역의 잠재적 역량 자체를 잠식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벌어지게 된다. 둘째, 기술 혁신과 산업 체제의 대규모 재조직화가 저지된다. 짧은 기간 동안

9) 이것이 1920년대를 전후한 영국과 미국의 제도주의자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를 비판한 지점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홍기빈, [비그프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책세상: 2011 특히 10장을 참조.

분명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류의 기술이나 구조조정 및 인수 합병은 활발하게 벌어지지만,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근본적인 기술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그에 걸맞도록 산업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조직하는 “산업 합리화”와 같은 것은 지연되거나 심지어 저지당하기까지 할 수 있다.¹⁰⁾ 셋째, 베블런과 케인즈가 공히 지적하듯이, 자본 시장을 포함하는 금융 시스템은 산업 활동의 조직이라는 과제와는 괴리된 상태에서 비합리적 투기 그리고 과도한 재자본화(recapitalization) 등의 논리에 휘말려 과도한 거품으로 치달았다가 장기적인 침체로 접어드는 이른바 거품 및 붕괴 순환 (boom and bust cycle)와 금융 위기의 불안정성을 본질적인 성격으로 갖게 된다.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들로서 여러 제도와 정책들이 발달하였다.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부문의 산업을 조직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공공 부문과 공기업 제도가 발달하였고, 투자의 “사보타지(sabotage)”로 인한 실업과 산업 침체를 막기 위하여 산업 정책과 노사정 합의와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등이 발달하였고, 장기적인 산업 구조의 합리화와 기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국책 금융 기관들이 나타났고, 금융 시스템이 산업 활동과 과도하게 이탈하면서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불안정성을 낳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종 금융 규제와 시스템 설계가 발전하였다.¹¹⁾

2) “경제”와 사회 사이의 갈등

설령 앞의 두 영역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지 않고 성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둘을 합친 “경제” 영역의 작동은 사회 영역과는 일정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해안을 이어받은 칼 폴라니의 저서 [거대한 전환]은 이를 간명한 논리로 설명한다. 자본주의 산업 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은 상품이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 상품이 된 인간과 자연은 한편으로는 영리 활동의 영역에 작동하는 투자자의 자산 가치 극대화라는 논리 다른 한 편으로는 산업 과정에서의 기계적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논리에 종속되게 된다. 하지만 폴라니가 말하는 대로, 이들은 본래 상품이 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들은 모두 각자가 살아야 할 삶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며 그들의 삶의 활동이 바로 이 사회라는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라는 골간 조직”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이들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영리 활동 및 산업 영역의 작동을 위한 작업상의 허구 즉 “상품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영리 활동의 논리에 따라 산업 활동이 활발하게 조직될 경우 즉 “자기 조정 시장”이 활발하게 작동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인간과 자연에는 이러한 “상품 허구”가 더욱 강하게 강제된다. 이는 이러한 “상품”으로서의 면모 이외에 자신들이 영위하는 삶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 종종 돌이키기 힘든 파괴적인 영향을 낳으며, 이에 따라 이들을 기본 요소로 구성되는 여러 사회적 관계들 또한 “황폐화”되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다. 이에 사회는 스스로를 이러한 파괴적 결과에서 보호하기 위해 “경제”의 작동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되며, 이에 “이중 운동”이

10) 1920년대 유럽과 일본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중화학 공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의 전반적 재구조화가 절실하지만 이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민간 자본가들의 영리 추구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이러한 “산업 합리화” 운동과 파시즘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효시가 되었던 연구는 Charles Maier, *In Search of Stability: Explorations in Historical and Politic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11) 이를 다룬 연구는 무수히 많지만, 초기에 나온 선구적 연구로 Andrew Shonfield, *Modern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나타나게 된다.

주지하듯이, 19세기 말 이래의 여러 사회 제도와 사회 정책들은 바로 이러한 두 영역 사이의 “이중 운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들이 많다. 변화무쌍한 경기 순환과 산업 현장에서의 치명적인 결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사 관계의 제도화와 각종 노동 입법들이 나타났으며, 불안정한 시장 소득을 보전하여 삶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서 사회 보장 정책들이 나타났으며, 시장 경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삶의 필요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보건, 육아 등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발달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로는 이 영역에서 여성, 인종, 소수자들을 감안한 보다 포괄적인 사회 정의의 개념을 내세워 보다 적극적인 포괄적 “해방(emancipation)”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에 사회 영역과 “경제” 영역을 조율시키는 장치와 제도 및 정책은 더욱 복잡하고 섬세한 문제가 되었다.

3) 사회와 생태

생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1950년대와 60년대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의 미국 자본주의는 완전 고용에 가깝도록 산업 생산의 조직이 성공적이었으며 각종 사회 정책도 확장일로에 있어서 사회와 경제의 조율 또한 그 이전 이후의 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기간이었다. 이렇게 산업 사회 전체가 화폐적 의미의 자본 축적, 산업 생산의 효율적 조직, 사회의 조정 모두에 있어서 일정한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그 전체의 작동이 생태 영역과 일으키는 갈등 및 모순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20세기 말엽 영리 활동과 산업의 조직 모두가 지구적 규모로 확대되는 지구화(globalization)가 벌어지게 되자 생태 영역과의 충돌은 그 규모에서나 심도에 있어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현재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기후 온난화를 끔찍이 막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기후 불안정성은 각종 대규모 재난의 발생 그리고 세계 식량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가격 등귀 등을 낳고 있다. 이와 맞물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사실상 산업 관계와 문명 전체의 근본적 전환을 뜻하는 “3차 산업 혁명”의¹²⁾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음도 분명하다. 나아가 급격한 지구적 규모의 산업화로 인한 수자원 관리 문제를 비롯한 각종 자원 고갈의 문제 또한 지금까지의 산업 문명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30년대의 뉴딜 및 나치즘을 경과하면서 자연 환경 파괴를 규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과 제도의 틀이 마련된 바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21세기의 생태 위기의 도전으로부터 산업 문명을 지속가능하게 만든다는 과제에 있어서 이러한 규제와 보상 등의 기존 정책 제도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보다 훨씬 큰 규모와 깊은 차원에서 “경제 성장”이라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규정하고 고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12)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 하지만 내가 쓰는 “제 3차 산업 혁명”이라는 용어는 리프킨이 말하는 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정보 기술과 이에 맞물린 제조업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이해한다.

4. 자본 시장: “사회 경제 모델”로서의 LME의 조직 원리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를 이렇게 4개의 영역과 3개의 갈등 지점을 포괄한 것으로 생각해보면, 이를 내부적으로 순탄하게 서로 조응하도록 만드는 “사회 경제 모델”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다. 인간 세상은 19세기의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천진난만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효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이합집산하는 “물방울”과 같은 개인들의 자유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균질적인 단일의 장이 아니다. 이 4개의 영역은 질적으로 서로 상이한 논리와 메커니즘으로 구성되는 것들로서, 보이지 않는 손 따위의 섭리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응하기는커녕 서로 충돌하고 반목하기 일췌이다. 그리고 그 충돌과 반목이 심해지게 되면 생태를 제외한 다른 세 영역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거나 지속적인 안녕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사회 경제 모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완전히 이질적인 내부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상충하게 마련인 3개 혹은 4개의 영역을 아울러 시스템 전체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의 문제이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다양한 모델을 바라봄에 있어서 보다 협소하게 좁은 의미의 “경제” 영역만에 초점을 두는 “경제 모델”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러한 조직 및 운영 원리의 문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개별 행위자들의 경우에는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목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당연한 원리이며, 전체 모델로서는 이러한 개별 행위자들의 활동이 소위 “구성의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 경제 성장률이나 여타의 지표로 측정되는 바의 실적 (performance) 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상호 보완성을 갖추는 것 정도가 또한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 경제 모델”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러한 “경제”의 순탄한 작동은 그 내부에 있는 영리 활동과 산업 사이의 갈등은 물론 그 밖의 사회 및 생태 영역과 서로 조응하게 만드는 일관된 방식을 가져야만 장기적인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현실을 볼 때, 표면적으로 보면 “개별 행위자들의 이익 추구를 조정하여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적 장치들”만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보이는 각 나라의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은 사실 그 배후에 산업과 사회와 생태 영역을 서로 조응시키는 장치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앞에서 나왔던 LME 또한 하나의 “사회 경제 모델”로서 확장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홀과 소스키스 등의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들에서는 그들이 핵심적인 관계라고 보았던 기업과 기업의 관계를 규제하는 장치로서 “시장”이라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지구적 자본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하나의 표준처럼 여겨지게 된 시장주의적 자본주의의 모델은 비단 기업들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사회 경제 모델” 전체 차원에서도 “시장”을 전체 시스템의 조직 및 운영 원리로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시장”이라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금융 및 자본 시장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겨나는 “자본 회계의 합리성”을 (막스 베버의 용어) 비단 영리 활동 뿐만이 아니라 산업, 공공 부문, 사회 정책, 심지어 생태 영역까지도 규제하고 조직하는 핵심 원리로 삼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요컨대, LME를 “사회 경제 모델”로 보자면, 이는 (금융 및 자본) 시장의 합리성으로 4개의 영역을 통합하는 조직 및 운영 원리로 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자본 시장은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단지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시장들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베블런이 이미 100년전에 통찰한 바 있듯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 단계는 자본 시장이 여타의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해

지배적 위치로 올라서게 된 19세기 말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갈라진다. 그 이전까지의 기업 조직들은 영리 활동 조직으로서의 측면과 산업 조직으로서의 측면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며,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시장 또한 순수한 화폐적 이윤 추구의 장으로서의 성격과 공동체 전체의 필요의 충족을 위한 산업 활동의 장으로서의 성격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기업 조직들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자유롭게 매매하는 자본 시장이 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 조직들이 “매물이(vendible)” 되자¹³⁾ 전자와 후자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고, 산업 활동의 구체적인 논리를 완전히 사상(捨象)해버린 순수한 자산 가치 극대화의 논리를 구현하는 장으로서 자본 시장이 전면에 나서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타의 재화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산업의 조직을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서게 된다. 그 이후로 자본주의 경제는 산업의 논리에 대해 별다른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이 오로지 자기 자산 가치의 극대화라는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부재 소유자들 (absentee owners)” 즉 대규모 투자자들이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막스 베버가 동시대의 자본주의를 관찰한 바 있듯이, 이러한 “자본 회계의 합리성”은 비단 산업 활동만이 아니라 국가 기구는 물론 사회 전반의 문화와 여타 정신 생활에까지 속속들이 파고 들어간다. 즉, 인간 세계의 만사만물은 이제 자본 시장의 합리성에 따라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재구성되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¹⁴⁾

하지만 이러한 초기의 금융 자본주의 형성은 사회적으로 거대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가장 앞서 나갔던 미국의 경우 1930년대의 뉴딜 이후로 나타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의 와중에서 거의 해체될 지경에 처하였다. 금융 및 자본 시장은 각종 규제에 부닥쳐서 산업 활동에 대한 일방적인 지배력을 크게 잃었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영리 활동의 논리만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되었다. 산업 활동은 국가와 노동 조합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경제 조직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반영한 복잡한 계획과 조정의 그물망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조직과 보호에 있어서도 무수히 많은 규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70년대 소위 전후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게 되고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구조 개혁이 진행된 80년대 그리고 공산권의 몰락과 함께 지구화가 본격화된 90년대로 들어서게 되자 이러한 경향은 역전되고 금융 및 자본 시장은 다시금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 먼저 대대적인 금융 탈규제와 자유화를 통하여 자본 시장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크기로 불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진행된 바, 기업 활동의 재량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은 곳곳에서 철폐되었고 전지구적인 규모에서 지구적 자본 시장의 명령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한 모든 생산 요소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로서 WTO 체제가 마련되었다. 각 나라에서는 “비효율적인” 국가 기구와 공공 부문을 축소하고 재구조화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거점으로서 이 자본 시장의 합리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90년대 들어 미국의 클린턴, 영국의 블레어, 독일의 슈뢰더 등 진보 세력이 집권하게 되었지만, 이들은 이러한 금융 및 자본 시장의 합리성에 따라 경제 영역과 공공 부문을 개조해야 한다는 것을 여전히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에서의 여러 제도와 정책들 또한 그러한 합리성과 최대한 양립가능한 형태로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보였다. 이에 자본 시장의 합리성은 교육이나 의료 부문을 넘어서서 사회 구석구석의 거의 모든 부문과 분야를

13) Veblen, *op.cit.* ch.6.

14) “자본 회계의 합리성”에 대한 베버의 언급은 곳곳에 있지만, 특히 그의 주저 [경제와 사회 Wirtschaft und Gesellschaft]의 경제 사회학 부분과 그의 강의록인 [일반사회경제사 General Economic History] 4장을 참조하라.

“합리적”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적인 잣대로 자리잡아 갔다. 이렇게 자본 시장의 합리성이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를 일관하는 하나의 조직 및 운영 원리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탄소 배출권 시장 형성”일 것이다. 시장 지상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시카고 학파에서 이미 70년대부터 제출된 이론으로서, 환경 문제 또한 “비효용(disutility)을 매매할 시장”을 형성하여 그 적절한 가격이 책정되도록 하면 (자본) 시장의 합리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 기후 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의 문제에까지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자본 시장의 합리성이라는 원리로 조직 및 운영되는 LME의 자본주의 형태는 따라서 그 내부의 4개 영역 사이에 철저한 위계적 관계를 형성한다. 자본 시장이 정점이 되며, 이곳에서의 가치 극대화라는 것이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최고의 합리성으로 자리잡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활동하여 “화폐를 수단으로 한 화폐의 생산”에¹⁵⁾ 종사하는 투자가들과 여타 영리 조직들은 그러한 합리성에 맞도록 행동하는 데에 있어서 산업 조직은 물론 사회 및 생태 영역 전체에 대해서 최대한의 자유와 재량을 부여받는다. 이들의 성공과 활동 확장이야말로 온 사회에 번영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념이 사회 전체에 단단히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에 따라 산업 조직이 재편되며, 사회의 각 영역은 그러한 산업의 재편 과정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가장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그러한 사회 영역의 급격한 재편의 논리에 따라 자연 및 생태 영역은 소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고 이용된다.

물론 이렇게 자본 시장의 합리성에 따른 위계적 질서를 조직 및 운영 원리로 삼는 “사회 경제 모델”로서의 LME 에는 무수히 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재구성이 본격화되었던 80년대의 영국과 미국에서부터 2011년의 “오쿠파이” 운동과 “인디그나도스” 운동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사회 곳곳의 저항은 그칠 날이 없었고, 소위 “신자유주의의 모순”이라는 말은 사회적 담론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식상한 말이 될 지경이었다. 그런데 심지어 2008년의 대규모 금융 위기가 터져나온 오늘날에도 이러한 형태의 자본주의는 여전히 곳곳에서 지배적인 질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¹⁶⁾ 이는 어째서일까?

이는 대단히 깊은 분석을 요하는 큰 질문이지만, 우리의 “사회 경제 모델”의 틀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모델이 이질적인 4개의 영역과 그 사이의 갈등 지점에 대해 동일한 조직 및 운영 원리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와 그에서 도출되는 정책 및 제도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내기 힘든 인기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반대로 바로 그 점 때문에 비록 다수는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조직 및 운영을 지지하고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세력들을 강고한 역사적 블록으로 조직해내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점은 신자유주의 반대 진영의 상태와 비교해 보면 선명하게 드러난다.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산업의 장기적 전망을 망가뜨리고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가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사회 각 부분을 황폐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생태 환경을 위기에 빠뜨리는가에 대한 비판은 차고 넘치며 이에 동조하는 이들도 대단히 많다. 하지만 이들 각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여러 입장과 주장들은 서로 지극히 이질적이다. 지구 온난화를 고발하는 환경 운동가와 대기업의 횡포에 궁지에

15) 이는 피에로 스라파 (Piero Sraffa)의 유명한 저서의 제목을 패러디한 것이다. 스라파의 상품 행렬 (matrix)을 여러 기업의 수익률로 바꾸어 채우면 자본주의의 진면목에 가까이 갈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 것이다.

16) 이를 지적한 논문들은 많지만, 대표적인 것으로서 Colin Crouch, *Strange Non-death of Neoliberalism* London: Polity Press, 2011.

몰린 중소기업 사장이 서로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문제를 관통하는 공동의 조직 및 운영 원리에 합의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만큼 어렵다. 대안적인 정치경제 질서와 모델을 희구하는 이들이 많은 숫자라고 해도 이들이 통일된 역사적 블록을 구성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우며, 사회 전체를 아울러 그러한 질서와 모델을 세우고 유지할 수 있는 조직 및 운영 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시장주의적 사회 체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다고 해도 단단히 조직되어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이들은 목소리는 크고 행동이 격렬할지는 몰라도 사회 전체를 조직할 수 있는 대안적인 틀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에 따라 양쪽 진영 중간에 펼쳐진 광범위한 중립적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역사적 블록의 ‘헤게모니’는 이렇게 하여 전 사회에 관철된다.

따라서 대안적인 “사회 경제 모델”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구상의 시점부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질적이고 다종다기한 갈등과 요구들을 아우를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자본 시장의 합리성”이라는 원리를 대체하여 자본주의의 4 영역을 조율시켜 일관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조직 및 운영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첫째, 이러한 원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 제도들이 기능적으로 서로를 보강하면서 하나의 모델로 설 수 있는 ‘제도적 상호 보완성’을 달성할 수가 있다. 현존하는 여러 일국 자본주의 모델 내에 존재하는 ‘상호 보완성’은 미리 정해진 청사진을 설계도로 삼아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행위자들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의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져 온 고유의 역사적 퇴적물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앞에서 본 상이한 영역의 이질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행위자들이 시장적 방식이 아닌 사회적 방식으로 서로의 제도적 틀을 조화시켜나가려면 이들이 모두 함께 공유하는 조직 및 운영 원리가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대안적인 모델을 지지하고 이를 관철시켜나갈 것을 꾀하는 장기적 안정성을 가진 역사적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이한 사회적 힘과 세력들을 추동하고 효과적으로 조직해 내기 위해서도 이 대안적인 조직 및 운영 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5. 인간의 발전: 대안적 “사회 경제 모델”의 조직 및 운영 원리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밀어붙이던 영국 대처 수상의 유명한 말, “대안은 없다”라는 말은 이후 몇 십년간 진보 세력에게 패배감을 안겨 주었던 문장이었다. 하지만 이 말에서 정치적 레토릭을 걷어내고 그 실제 의미를 따져본다면, 이 말은 “산업 시대의 사회 경제 모델 전체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자본 시장의 합리성을 대체할 수 있는 조직 및 운영 원리는 없다”는 말일 뿐이다. 하지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제 3차 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 기술 조건의 출현은 이에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조직의 조직 및 운영 원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물론 자본 시장과 영리 활동의 여러 제도 및 기구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합리성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회 경제 모델의 중요한 준거점의 하나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은 틀림이 없다. 이러한 21세기의 새로운 상황에서 볼 때 과연 자본 시장의 합리성이라는 오래된 금융 자본주의의 조직 및 운영 원리가 계속 유효할 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상황에 더욱 적합한 사회 경제 모델의 조직 및 운영 원리로서, “인간의 발전”이라는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오래된 이상: 부의 근원으로서의 인간 발전

놀랍게도 화폐 증식의 합리성을 비판하고 이를 대체할 삶과 사회의 조직 및 운영 원리로서 ‘모든 성원들의 인간적 발전’을 제시하는 논리는 이미 고대 그리스 문명의 철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전개된 바 있다. 개인으로서나 또 공동체로서나 생명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삶 (eu zen)’이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집안 (oikos)’과 공동체인 ‘나라 (polis)’ 모두에서 ‘좋은 삶’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수단을 조달해오는 활동인 ‘획재술 (chrematistike)’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화폐 증식의 합리성은 이렇게 ‘좋은 삶’의 수단에 불과한 재물과 화폐를 증식하는 것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는 것을 원리로 한다. 이렇게 되면 목적과 수단의 전도가 벌어져서 ‘화폐의 증식’을 무한히 추구하게 되는 가운데 인간의 개인적 공동체적 삶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삶의 질이 한없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었다.¹⁷⁾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좋은 삶’의 내용에 대해서 일의적인 규정을 하려고 들지는 않았지만, 그 당대의 그리스인들이 최상의 삶이라고 여기던 ‘유데모니아 (eudaimonia)’를 중요시하였다. 이 개념은 오늘날까지 내려온 인간 발전의 개념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머릿 속에 깃든 ‘신성(daimon)’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욕망과 능력을 풀어내어 발전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인간 존재에 주어져 있는 그대로의 욕망과 능력은 많지도 않으며 또 동물과 그다지 다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오로지 이 ‘신성’의 지도를 따라 욕망을 더 세련되게 발전시키고 능력을 더 높은 단계로 만들어 낼 때에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좋은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생각이다. 이 ‘신성’을 일깨우는 과정에서 여러 다른 인간들과 함께 폴리스를 구성하여 서로 토론하고 협동하면서 ‘좋은 삶’에 대한 공동의 상(像)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말할 것도 없다. 요컨대, 진정한 부는 인간의 여러 능력과 욕구가 개발된다는 의미에서의 ‘좋은 삶’이며, 화폐와 재물은 그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초적 아이디어는 근대의 사회 사상에도 중요한 자욱을 남겼다. 헤르더와 칸트에서 헤겔과 실러에 이르는 독일 관념론 철학은 인간의 모습을 이성 (Vernunft)의 지도에 따라 여러 다양한 욕구와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개발하는 존재로 그려냈고, 이러한 의미에서 씨앗이 성장하여 안에 잠재한 것들을 펼쳐난다는 의미에서 ‘발전 (Entwickl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¹⁸⁾ 비슷한 시기 갈리아니 (F. Galiani) 등의 이탈리아 계몽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은 한걸음 나아가 정치경제학의 입장에서 ‘진정한 부는 인간’이라는 입장에 도달하기도 한다. 모든 사회 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교육을 통해 능력과 욕구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신뢰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갖추고 강화하는 것이 경제적 부의 진정한 밑받침이 된다는 것이었다.¹⁹⁾ 요컨대, 18세기 이전까지 부의 진정한 근원을 인간의 발전과 사회적 유대의 강화에서 찾는 사고방식은 보편적이고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었다.

17) 홍기빈,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책세상: 2001. 또 ‘유데모니아’와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Bernard Yack, *The Problems of a Political Animal: Community, Justice, and Conflict in Aristotelian Political Thought* New Yor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 1993.

18) “Entwicklung”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ed. by Joachim Ritter, et al. Band. II, Berlin: Schwabe, 1972.

19) Sophus Reinert, “The Italian Tradition of Political Economy: Theories and Policies of Development in the Semi-periphery of the Enlightenment” in *The Origins of Development Economics: How Schools of Economic Thought Have Addressed Development*, ed. by K. S. Jomo and E. Reinert New Delhi: Tulika Press, 2005.

2) 지식 기반 경제의 도래

하지만 고전파 정치경제학이 정통 (orthodox) 사상의 위치를 차지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와는 기본적으로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경제 사상을 지배하게 된다. 고전파 신고전파 케인즈학파 심지어 마르크스주의까지 공통적으로 지배하는 부의 개념은 생산 요소의 생산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 요소들을 투입물로 하여 생산 과정을 통해 어느 만큼 많은 산출을 끄집어낼 것인가가 부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이는 '생산 함수'라는 개념에 집약되어 있다. 즉 자본 (K) 과 노동 (L) 이 생산 요소로 들어가며, 여기에서 생산성을 끌어내는 방법 즉 기술 (f) 에 따라 총 생산 (Y) 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 사고방식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발전이라든가 사회적 신뢰 혹은 유대의 강화와 같은 것은 자리를 찾기 힘들다. 노동은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생산성을 가진 '노동력' 즉 일정한 비용을 댓가로 투입하는 물질적 생산 요소로 여겨진다. '기술'은 좁은 의미에서의 생산 방식으로 국한된다. 이러한 물질적인 부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그 이전에 존재했던 인간 발전과 사회의 강화로서의 부라는 개념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부의 개념은 제 1차 및 2차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거대한 물질적 생산력을 구축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삼았던 19세기와 20세기 중반까지의 자본주의에서는 일정한 현실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소위 '지식'이라는 생산 요소가 부가 가치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른바 '탈산업 사회' 혹은 '지식 기반 경제'가 도래하게 되면서 19세기의 고전파 경제학 이후 두 세기 가까이 지배적 위치에 있었던 이 '생산 함수' 식의 부 개념은 서서히 낡은 것이 되어간다.²⁰⁾ 첫째, 자본과 결합되는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 이외에 인간의 인간적 측면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기술 그 자체를 개선하는 인간의 역할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둘째, 생산 과정의 결과물들은 수요 함수로 나타난 구매력의 평가 이외에는 어떤 식의 '사회적 가치'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²¹⁾ 셋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각종의 사회적 비용 (social costs) 이 얼마나 되며 이를 누가 어떻게 치르는지 그 장기적 귀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²²⁾

1990년대 이후 '지식 기반 경제' 그리고 이와 연결된 '인간 자본 (human capital)'의 담론과 정책 시도가 소위 '제 3의 길'을 추구했던 영국의 신노동당 정권에서 나타난 바 있었다. 이 담론은 이러한 산업 구조와 경제 자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 떠오른 '지식'을 생산하고 풍요하게 하는 주체로서 '노동'을 다시 정립하고 심지어 이를 통하여 노동과 자본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인간은 스스로의 욕구와 능력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주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이러한 인간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 생활이 실제로 펼쳐지는 사회 부문의 발전과 강화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보조하는 장치로서가 아니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 강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인간을 기술

20)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고 '지식'이라는 생산 요소의 압도적 중요성을 강조한 선도적 저작은 아마도 Peter Drucker, *The Age of Discontinuity: Guidelines to Our Changing Society* New Brunswick: Transaction, 1992(1968).

21) 사회적 가치가 소비 함수의 평가를 거친 시장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초기의 주장은 Gunnar Myrdal, *The Political Elements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Theor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3. 특히 6장을 보라.

22) 이 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저작은 Karl William Kapp, *The Social Costs of Business Enterprise*, 3rd ed. Bombay: Asia Publishing, 1963.

및 사회와 분리된 단순한 투입 요소로서의 ‘노동’으로 바라보고 단지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과 경쟁력만을 강조하는 담론과 정책 방향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했다.²³⁾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고 제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화석 에너지로부터의 탈출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기술적 변화 상황은 가히 ‘제 3차 산업 혁명’이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현존하는 바의 사회적 상황에 기초하여 여러 영리 활동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예측과 평가에만 기초하여 산업과 사회를 조직하는 자본 시장의 합리성은 미래 사회의 조직 및 운영 원리로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술과 사회의 패러다임은 ‘인간 발전’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상이자 부의 개념을 다시 시대에 맞게 되살려내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생산의 투입물로 파편화된 노동자 개인의 ‘가방끈’과 ‘스펙’을 불리는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베블런의 지적대로, ‘지식’이란 개인이 아닌 사회 공동체 전체에 축적되고 활용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 개인의 발전이 벌어지는 장인 사회 전체의 발전과 강화 그리고 유기적 연대의 증진이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할 요소이다. 이러한 ‘인간의 발전과 사회의 강화’가 새로운 시대의 기술 패러다임에 조응하는 “사회 경제 모델”의 대안적 조직 및 운영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대안적인 “사회 경제 모델”의 몇 가지 원칙들

자본 시장의 합리성에 기초한 LME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CME를 구축한다는 현재의 과제에서 볼 때, ‘인간의 발전과 사회의 강화’라는 원리에서 몇 가지의 핵심적 원칙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ㄱ. 성장 개념의 재정: 화폐 소득으로 나타나는 부가 가치만을 포착하는 현재의 국민 계정(national account) 그리고 거기에서 계산되는 GDP의 기계적 증가율로만 포착되는 현재의 성장 개념은 ‘인간의 발전과 사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생태 영역과의 조화라는 원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다시 말해서 ‘부’와 번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 기초하여 새로운 거시 경제 모델의 창출과 이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국민-사회 계정(national-social account)의 창출에 이르는 전반적인 개혁을 의미한다.²⁴⁾ 첫째, 인간과 사회가 진정으로 부유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인간 발전과 사회 강화’를 측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대안적 회계 시스템과 대안적 성장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거의 무시되어 온 바, 영리 활동에 의한 산업 조직에서 인간, 사회, 자연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산업 체제에서 새로운 산업 체제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ㄴ. 인생 주기의 재음미: 지금까지 사회 정책 분야의 일각에서만 회자되었던 ‘인생 주기

23) 이는 상대적으로 ‘지식 자본’의 사회적 차원을 강조한 같은 시기 스웨덴의 정책과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서는 Jenny Andersson, *The Library and the Workshop*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24) 이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으로는 Tim Jackson, *Prosperity without Growth: Economics for a Finite Planet* London: Routledge, 2011.

(life-cycle)’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이를 경제와 사회가 서로 조응하도록 만드는 정책과 제도의 기본틀로 활용해야 한다. 사회 정책에서의 ‘인생 주기’란 인간과 사회를 재생산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과 지출을 추산하는 틀로 주로 활용되었지만, ‘인간의 발전’이 진정한 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보다 훨씬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인생 주기란 다름 아닌 인간의 다양한 능력과 욕구가 계속 개발되고 확장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 즉 우리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 주기의 각 국면에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욕구가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또 어떠한 능력 개발의 가능성과 욕망이 있는가를 사회 전체 차원에서 예측하고 또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단 사회 정책 차원만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 활동 전체의 조직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즉, 이는 20세기에 존재했던 바, 기술적 합리성에만 기반하여 이루어졌던 기계적인 경제 계획 (economic planning)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욕구와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이 최대한으로 충족되고 또 확장되도록 만드는 유기적인 사회-경제적 계획 (social-economic planning)이 될 것이다. 생애 주기와 결합된 기존의 복지 제도 및 장치들과 교육 및 넓은 의미의 직업 훈련 제도들은 이러한 원칙에 의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회 경제 시스템의 중추를 이루게 된다.

ㄷ.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의 결합: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두 정책과 제도는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등의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미 1930년대부터 이 두 영역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 정책이 없이 경제 성장이 장기적으로 담보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80년대 이후 스웨덴 내부에서도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변화가 있었지만, 두 영역에서의 정책과 제도를 하나로 연결하여 본다는 틀은 변함이 없고 이는 21세기의 지구화 와중에서도 스웨덴 모델이 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모두 유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²⁵⁾ ‘지식’과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21세기의 경제에서 사회를 건강하고 활력있게 유지하는 과제와 경제 활동을 부양하는 과제는 서로 호순환 관계를 이루는 동일한 과제로 여겨져야 한다.

ㄹ. 산업의 조직과 조정의 기초를 넓힌다: 현재의 시장주의적 경제 모델에서 산업의 조직과 조정은 거의 전적으로 자본 시장의 합리성에 지배되는 투자자들에게 배타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는 자본 시장의 판단이 경제학자들의 주장대로 ‘완벽한’ 것이라면 나름의 합리성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통과한 이후 금융 및 자본 시장의 합리성에 대한 신화는 큰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2000년의 닷컴 버블 붕괴가 보여주었듯, 예측하기 힘든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데에 자본 시장은 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벌어질 역동적인 산업의 재조직과 재조정에 있어서는 자본 시장으로부터 온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정부, 소비자, 노동 조합, 지역 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stakeholders) 로 그 조직의 기초를 넓혀야 한다. 이 이해 관계자들은 또한 각자의 협소한 이해 관계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가는 기술 및 세계 경제의 조건 속에서 사회 전체가 신속하게 산업의 조직 및 조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폭넓게 제기하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산업을 현재의 지구적 경제의

25) Jenny Andersson, *Between Growth and Security: Swedish Social Democracy from a Strong Society to a Third Wa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6. [제니 앤더슨, 박형준 역, [성장과 안정 사이](가제) 책세상: 2013 (근간)]

가치 사슬 (value-chain)에서의 유리한 고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산업 조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산업을 자본 시장의 배타적 통제에서 풀어내어 보다 폭넓은 사회 전체와 상호 결합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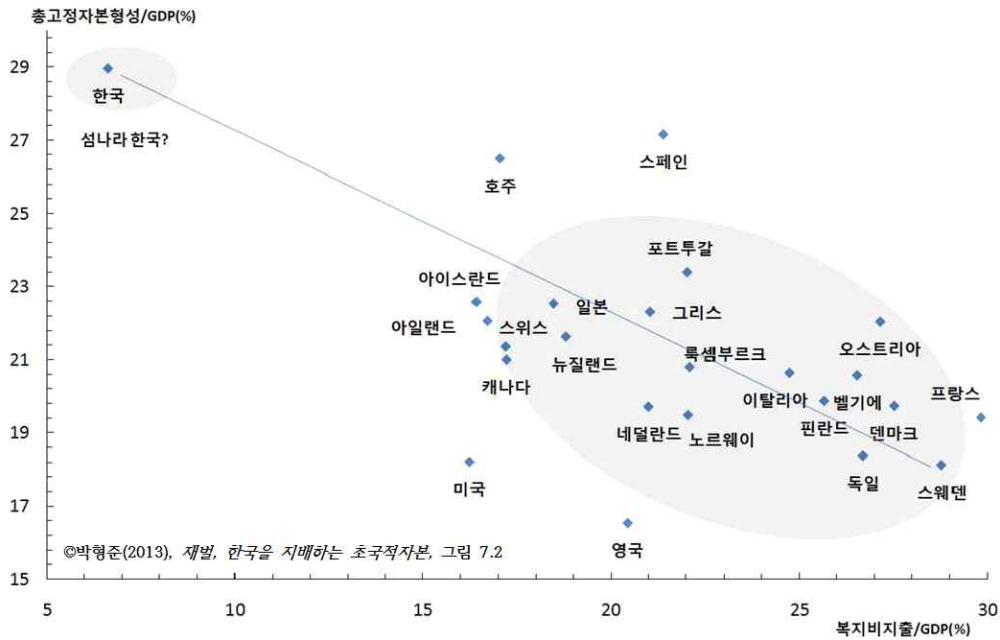
6. 맺으며

21세기에 들어서서 놀라운 규모와 속도로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생산과 부의 관점을 지양하고, 사회를 강화하고 인간을 발전시키는 노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경향은 이미 유럽을 필두로 한 OECD 국가들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의 박형준 박사가 작성한 아래의 차트를 보면²⁶⁾ 이러한 추세를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2000년대의 10년간 OECD의 여러 나라들 내에서 고정 자본 형성의 지출과 사회 복지비 지출을 각각 GDP에 대한 비율로 바꾸어 나타낸 것이다. 전자는 사람 보다는 고정 자본에 대한 투자로 물질적 생산력에 치중하는 옛날 식의 사회 경제 패러다임을 나타내는 대리 지표로서 또 후자는 그 반대로 복지 지출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강화와 인간 발전에 치중하는 새로운 사회 경제 패러다임의 대리 지표로서 보기로 한다.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후자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은 주목을 요하는 사실이다. 특히 경제 성장의 사회 경제 모델에 있어서나 성장 경로에 있어서나 여러 모로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이 지금 양 쪽 극단인 한국과 스웨덴의 중간 위치로 이동하고 있음도 여러 가지로 흥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실이다.

그림 2. 사회 경제 모델의 패러다임 전환

26) 박형준,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 책세상: 2013 (근간). 이 저서는 지배적 자본인 재벌의 차등적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한국 자본주의 모델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경험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주석: 모든 데이터는 2000년대 10년 동안의 평균값이다.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ECD.

사회적 평등과 더욱 인간적인 사회라는 당위적인 차원에서도 또 21세기의 기술 패러다임 전환과 조응하는 더욱 효율적인 사회라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60년대 이후 반 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기존의 한국 자본주의 모델은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에 봉착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포괄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구상하고 건설할 대안적 모델은 보다 포괄적인 “사회 경제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본 시장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갈수록 한계와 편협성을 드러내고 있는 원리가 아닌 인간 발전과 사회의 강화라고 하는 보다 민주적이면서도 보다 미래지향적인 원리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염두에 둘 때에 비로소 생태, 사회, 산업, 영리 활동의 네 영역 전체의 제도 및 정책들이 서로 상호 보완성을 이루는 하나의 앙상블로서의 안정적인 모델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Karl Polanyi(1957),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Press. [국역: 칼 폴라니, 홍기빈 역(2009), 『거대한 전환』 길.
- Karl William Kapp(1963), *The Social Costs of Business Enterprise*, 3rd ed. Bombay: Asia Publishing.
- Andrew Shonfield(1968), *Modern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arles Maier(1968), *In Search of Stability: Explorations in Historical and Politic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yand, K., Mühle, G.(1972) “Entwicklung”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ed. by Joachim Ritter, et al. Band. II, Berlin: Schwabe.
- Peter Drucker(1992), *The Age of Discontinuity: Guidelines to Our Changing Society* New Brunswick: Transaction.
- Bernard Yack(1993), *The Problems of a Political Animal: Community, Justice, and Conflict in Aristotelian Political Thought* New Yor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horstein Veblen(2000),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 New Brunswick: Transaction. [국역: 토스타인 베블런, 홍기빈 역(2009),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책세상.
- Peter A. Hall, David Soskice(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홍기빈(2001),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책세상.
- Robert Boyer(2002), *Regulation Theory: the State of the Art* London: Routledge.
- Geoffrey Ingham(2004), *The Nature of Money* London: Polity Press. [국역: 죠프리 잉햄, 홍기빈 역(2011), 『돈의 본성』, 삼천리.
- Sophus Reinert(2005), “The Italian Tradition of Political Economy: Theories and Policies of Development in the Semi-periphery of the Enlightenment” in *The Origins of Development Economics: How Schools of Economic Thought Have Addressed Development*, ed. by K. S. Jomo and E. Reinert New Delhi: Tulika Press.
- Jenny Andersson(2006), *Between Growth and Security: Swedish Social Democracy from a Strong Society to a Third Wa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국역: 제니 앤더슨, 박형준 역(2013), 『성장과 안정 사이』 책세상.
- Colin Crouch(2011), *Strange Non-death of Neoliberalism* London: Polity Press.
- Jenny Andersson(2011), *The Library and the Workshop*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Tim Jackson(2011), *Prosperity without Growth: Economics for a Finite Planet* London: Routledge.
- 홍기빈(2011),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책세상.
- Franz-Xaver Kaufmann(2013), *Thinking about Social Policy: The German Tradition*, Heidelberg: Springer.
- Jeremy Rifkin(2013),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박형준(2013),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 책세상.